

공 개



의안번호	제 56 호
보 고 연 월 일	2022. 11. 23. (제 21 차)

보
고
사
항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등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2. 11. 23.

1. 보고주문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외국환업무취급 보험회사 1개사에 대한 제재현황 등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5-29조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DGB생명보험(주)에 대한 제재현황 등을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DGB생명보험(주)에 대한 제재 면제

- ☐ DGB생명보험(주)는 금리 급등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확대로 '22.4.1.~6.30. 기간 중 종합포지션 한도를 총 62회 위반하였으나 한도위반이 자기자본 감소 등에 기인하므로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제재를 면제('22.10.19. 통보)

나. 보험회사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회신

- ☐ '22년 9월말 이후 외화자산·부채의 규모를 급격히 확대하지 않았음에도 시장금리 급상승 등에 따른 대규모 채권평가손실로 인해 한도를 위반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외부환경 급변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2년 10월부터 '2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제재를 면제('22.10.19. 회신)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외국환포지션 한도규제 제도 : <붙임 2>

라. 제2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2.11.17.) 보고필

<별지>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등

I. DGB생명보험(주)에 대한 제재 면제

1. 위반 사실

- 「외국환거래법」 제1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21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종합포지션을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 DGB생명보험(주)는 금리 급등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확대로 '22.4.1.~6.30. 기간 중 종합포지션 한도를 총 62회 위반(일평균 50,907천달러 초과)하였고,
 - 한도위반 사실을 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음

DGB생명보험(주)의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현황

(단위 : 천달러, %)

한도위반 규모	종합포지션 (a)	포지션한도 (b)	한도위반액 (c=a-b)	한도위반율 (c/b)
최고('22.6.14.)	141,595	45,141	96,454	213.7
최저('22.6.30.)	45,576	45,141	435	1.0
일평균('22.4.1.~6.30.)	96,048	45,141	50,907	112.8

2. 제재 내용

- 한도위반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외부환경의 급변에 따른 자기자본 감소 등에 기인하므로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보험업감독규정」 제5-28조 제3항*에 따라 DGB생명보험(주)에 대하여 제재를 면제('22.10.19. 통보)

*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II. 보험회사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회신('22.10.19.)

1. 비조치의견서 요청 내용(신청인 : 생명보험협회)

- ☐ 보험회사가 최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대규모 채권평가손실 확대로 인해 「보험업감독규정」 제5-21조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 한도위반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5-28조에 따른 제재 조치를 면제

2. 비조치의견서 회신 내용

- ☐ 보험회사가 '22년 9월말 이후 외국환포지션 산정 대상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규모를 급격히 확대하지 않았음에도
 - 시장금리 급상승 등에 따른 대규모 채권평가손실 발생으로 인해 외국환포지션 한도가 급감하고 매도초과포지션이 급증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 '22년 10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제5-28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보험업감독규정」 제5-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 조치를 면제
- ※ 다만,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하고, 위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도초과 원인, 조치사항 및 한도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월별 외국환포지션 관리현황 및 세부내역을 익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3. 비조치의견서 판단 이유

- ☐ 최근 보험회사의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 가능성은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외부환경의 급변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한도 위반의 경우 한시적으로 제재 조치를 면제할 필요

관 계 법 규

□ 외국환거래법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통화 자산·부채 비율을 정하는 등 외국통화의 조달·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건전성 규제)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산정방법, 시기 및 기간을 정할 것
3. ~ 10. (생략)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 가.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은 제외한다)
 - 나. (생략)
3. ~ 8. (생략)
-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1. ~ 2. (생략)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 가. (생략)
 - 나.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에 한정한다)
 4. ~ 13. (생략)
- ④ ~ ⑦ (생략)

□ 보험업감독규정

- 제5-20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각 외국통화별 종합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외화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처리와는 별도로 외국환포지션 계산시 외화 부채에 포함한다.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이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이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과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21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의 지급여력금액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말하며, 미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 환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3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 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8조(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5-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9조(제재현황 보고) 감독원장은 제5-27조 및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대하여 제제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후 1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5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감독규정 제5-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와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지 제24호서식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상 외화자금상황의 대차대조표난내계정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외화표시자산 또는 부채중 해당 외국통화와 원화간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하여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한다.
2.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지 제24호서식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상 외화자금상황의 파생금융거래관련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입분, 신용 및 그 밖의 파생금융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입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도분을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 나. 선물외화부채는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도분, 신용 및 그 밖의 파생금융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도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입분을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통화옵션거래의 환율위험을 환율변동에 따른 옵션가치의 변화도(델타)를 사용하여 관리할 경우, 자체적으로 산출한 위험노출액(명목금액×델타)을 선물외화자산 또는 부채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 금융당국의 공문등(「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처리절차) 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5조제1항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소관부서에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요청서가 다른 소관부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배정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해석 요청대상이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이거나 비조치의견서 요청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여 금융감독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이첩받은 요청서가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배정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 요청시 재지정 요청 부서의 의견 청취 후 소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와 금융감독원은 제5조제1항의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 소관부서는 법령해석 요청사항이 검사·제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의견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소관 재지정과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⑨ 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는 회신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금융당국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제9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가 필요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3.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률자문을 거치는 경우

4. 소관부서가 다수이거나 소관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⑪ 금융당국은 제10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시 연장사유와 회신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조건부 답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내용만으로는 제재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을 할 수 있다.

제12조(비조치의견서의 효력) ①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4.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5.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할 때 제2항에 따라 사후에 비조치의견서의 회신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신내용의 공개) ①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후 10일 이내에 회신내용을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공개 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인과 협의하여 비조치의견서의 공개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회신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외국환포지션 한도 규제 개요

- (제도 개요) 외환건전성 확보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 관리 등을 위해
외국환포지션(종합, 선물환)을 자기자본 대비 일정 한도 내로 규제

금융권역별 외국환포지션 한도 현황³⁾

구분	은행·종금	금융투자	보험
종합 포지션 ¹⁾	자기자본의 50%		지급여력금액의 30%
선물환 포지션 ²⁾			규제 미적용

- 주: 1) 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와 통화별 종합매도초과포지션의 합계 중 큰 금액을 한도내에서 관리
2) 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에서 통화별 선물환매도초과포지션의 합계를 차감한 잔액을 직전 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 동안 산술평균하여 한도내에서 관리
3) (은행·종금) 한도 설정은 기재부, 별도한도 승인은 한은, 제재는 금감원이 담당
(금투·보험) 한도 설정은 금융위, 별도한도 승인 및 제재는 금감원이 담당

- (제재 기준) 과거 1년간 위반횟수 등에 따라 주의 조치,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 조치 등 제재 부과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 시 제재 기준

위반 구분	제재 내용
· 과거 1년간 1회 위반	주의 조치
· 과거 1년간 2회 위반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만큼 감축
·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 · 고의 위반 · 3영업일 이내 위반사실 미보고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의 2배를 한도위반일수만큼 감축
· 허위보고, 미보고	주의, 시정명령, 한도감축

※ 감독원장은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시장분석과	외환감독국
연 락 처	2100-2855	3145-7933